

‘창원사랑상품권’ 판매
월 최대 25만원 할인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13일부터 ‘창원 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만 14세 이상인 개인이면 누구나 창원사랑상품권 지류와 모바일 각각 월 최대 25만원까지 10% 할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창원사랑상품권 지류를 월 최대 500만원까지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창원사랑상품권 지류 구매는 신분증과 본인 인증 가능한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등을 지참한 뒤 창원소재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창원사랑상품권 모바일은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창원사랑상품권은 창원지역 전통시장·주유소·학원·음식점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인 창원시설공단·창원레포츠파크·창원문화재단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마케팅추진부 최명희 부장은 “창원 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와 코로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상생하기를 바란다”면서 “창원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기간 판매 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소진되기 전 구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일국 기자
kookie@meconomynews.com

막가는 민주당, 이번엔 ‘은행이자 중단법’ 주장

홍익표 “금융권 코로나 이익 커… 이자 멈추는 한시특별법” 주장
학계 “IMF 같은 대란 염려, 반시장적 발상 납득 안 돼”
이낙연 “공식 논의 된 적 없어… 정치권의 이자 관여는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경기부양 대책으로 내세우는 이익공유제 참여 대상에 금융업계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금융권이 고통분담을 위해 이자 수취를 중단하거나 가압류를 금지하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9일 한라디오 방송에서 “금융권과 비금융 실물경제의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세계적인 현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라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 의장은 그러면서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료처럼 이자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은행이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동안은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 의장은 또 이익 공유를 위한 기금 조성에 금융권의 동참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이미 금융노조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홍 정책위 의장은 “첫 번째는 자발성,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 내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데다 당내에서 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해 구성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 단장이다. 집권여당의 정책방향을 잡는 핵심인물인 셈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은행의 이자 수취 중단 주장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며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홍 정책위 의장의 주장에 우려를 보였다.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정치논리가 주입되면 오히려 경제상황이 악화한다는 염려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은행이 시장에 유통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만기를 연장시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시장경제DB

놓은 상황이라 부실화한 채권이 더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경제침체에 따른 부실채권이 쌓이면 은행에 위기가 오는 것은 당연한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자 제한은)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막을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IMF처럼 경제 재난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손충당금은 재무제표상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어음·외상매출금·대출금 등 채권에 따른 공제의 형식으로 계산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을 뜻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익공유제라는 발상 자체가 정치권이

수익을 낸 기업과 피해를 입은 국민을 갈라치며 정치적 프레임 만드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이런 (반)시장적 발상을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금융권에 희생을 강요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12월 16일 시중은행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예대 금리 완화에 마음을 써달라”며 예금과 대출금리 격차 축소를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여당의 압박과 별개로 금융당

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신용대출 조이기 에 나서면서 시중은행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분기 ‘영끌·빚투’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은행권 대출총량 관리에 나섰다. 은행권은 연말 신용대출을 일시 중지 신용대출 중단이 풀리면서 대출 수요가 폭증하자 금리가 원금 분할 상황까지 추진하는 등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오승영 기자 osy00326@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2014년 Press Lions Bronze Lion Campaign

Title: B 알파벳 비
Client: Accident Prevention Network 사고 방지 네트워크
Agency: OGIILVY BANGKOK 오길비 방콕

Copy: Text a letter. Lose vision of 64 meters of road.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입력은 64 미터를 눈 감고 달리는 것과 같다.

병원 간 만큼 보험료 더 낸다

금융위, '4세대 실손보험' 7월 출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변경 예고
재가입 주기 낮추고 보험료 차등제 도입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비급여 진료료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7월 출시된다.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핵심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한다는 점이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을 과다 청구하는 이들에게는 할증을 부과하고, 비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에게는 할인을 해주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제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9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먼저 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의료보험공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와 미적용 대상인 비급여를 분리했다. 이에 따라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적용하게 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요인을 놓고 급여 이용 때문인지,

비급여 이용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과잉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률이 올라간다.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인 자기부담률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10%p 올리기로 했다. 통원 공제금액은 외래 1~2만원, 처방 8,000원에서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게는 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대상자(암·심장·희귀난치성질환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급여 차등제의 적용은 안정적인 할인·할증을 통해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뤄진다.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는 5년으로 단

축된다. 현재 실손 보험의 보장 내용(약관)은 재가입주기인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기술이나 진료행태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재가입 주기가 단축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방향과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실손에 새로운 보장이 추가될 경우 기존 가입자도 5년마다 신속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 기존 가입자는 재가입 주기에 따라 보장 내용이 바뀐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출시되면 지난 3세대 착한실손 대비 약 10%, 1세대 실손보다 50~70% 보험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네이버·국민銀 불고 카카오 떨어졌다… ‘마이데이터’ 28곳 허가

고객정보 활용 ‘디지털 新사업’ 무한경쟁 돌입
중국 앗트그룹 논란에 카카오페이 ‘좌절’

블리카(토스), 미래셋대우, 농협중앙회도 분허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대주주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네이버페이·이앤셀도 가까스로 심사 문턱을 넘었다.

미래 금융시장의 통로로 꼽히는 마이데이터(My Data) 시대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초기 시장 선점을 두고 경쟁을 펼칠 기업은 28개사로 확정됐다. 고객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 신(新)사업 영역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 직후 본인 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가 모두 분허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에 허가를 받은 회사는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으로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는 각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사업이다. 개인이 특정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앱을 통해 모든 계좌, 카드 내역, 투자 종목, 대출 상환까지 금융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금융상품도 추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기 탓에 간헐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금융위가 선별을 거쳐 허가를 심사한 이유다. 심사를 통과한 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5곳이다. 여권사 중에서는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이 분허가를 받았다. 비비리퍼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하나금융·하나은행·하나카드·삼성카드·경남은행 등은 여전히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앗트그룹을 둘러싼 제재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다만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시사해 심사가 보류된 금융사들도 조만간 재도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를 두고 판단 기준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